

서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30% 지원

서울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이 추진된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되돌려 받는 셈이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존 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서울시, 최대 3년간 지원...2022년 2만명 혜택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 더하면 최대 80%까지

로 2020년 8000명, 2021년 1만3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보험가입 지원계획 수립 등 총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관련 정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지원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이 두 기관은 사업에 대한 공동 홍보도 맡는다.

이번 지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7기 공약인 '자영업자 3중세트'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자영업자 3중세트는 고용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 도입이다.

박 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폐업의 경우 어떤 보장도 없는 상태였다.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새롭게 재기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좀 더 자신감 있게 사업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양희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라 안타깝다"며 "고용보험 지원 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협동조합 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간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회보험을 매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20% 정도만 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홍보를 잘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13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 정책 소개 및 좌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박원순 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원순 "스마트시티 서울시, 빅데이터 기반 시민 삶 개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스마트시티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스마트 시티 서울' 좌담회에 참석해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과 혁신, 정책 등을 담은 하나의 그릇"이라며 "4차 산업혁명 혁신과장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서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 전역에 5만개의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시민 수요에 맞는 최적의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이 우울하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훨씬 유용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예컨대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민원전화나 다산 120에 AI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살리기에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유용하다"며 "경제 성장과 발전의 주요한 역량은 스마트시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시에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여러가지 도시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스마트시티를 통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시장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해킹 위험,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관련 법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어떻게 익명처리해서 활용을 증대할 수 있는지 관련 법안도 제출되고 서울시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실제 다보스 포럼 예측에 따르면 8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고 한다"며 "인공지능의 의사, 변호사, 공무원, 심지어 시장의 직무까지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로하고 공감하는 감정 등 여전히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업무도 있다"며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자리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참석했다. 성동구와 양천구는 지난 1월 서울시와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일자리 감소에 대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는 불 보듯 훤히"이라며 "스마트시티에서 소외될 수 있는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교육영역이나 복지영역에서 의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리가게 허가제' 본격 시행...서울 노점 사라진다



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 본격 시행 첫해를 맞아 영등포구 영중로 등 3개 지역(거리가게 26개소)을 거리가게 시범사업지로 조성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거리가게 허가제는 일부 특화거리를 제외하

고 가이드라인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운영권 전매·전대 금지, 최소 유효 보도 폭 2.5m 이상 확보, 횡단보도와 지하철 출입구와 버스·택시 대기공간 등까지 의무 간격, 운영자가 지켜야할 소방, 안전

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시행초기인 거리가게 허가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거리가게 시범사업'도 역점 추진한다. 자치구 공모를 거쳐 거리가게 개선이 시급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영중로 등 3개 지역을 본격시행 첫해의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 예산 33억원을 투입해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보도정비, 판매대 제작 등의 시설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지 중 영등포구 영중로는 대표적인 보행환경 열악 지역이다.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연장390m, 거리가게 45개소)의 일환으로 거리가게 허가제 전환과 함께 판매대 제작, 재배치, 보도정비가 이뤄진다.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연장 320m, 거리가게 106개소)과 동대문구 '제기역~경동시장 로터리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 255m, 거리가게 75개소)은 전통시장에 인접해 유동인구는 많은 반면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박태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과 거리가게 운영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새로운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서울시, 어르신돌봄

가족 여행 보내준다

서울시는 어르신돌봄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차매·노인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3차례로 나눠 휴가를 제공한다. 1차는 봄 4~5월, 2차는 여름 7~8월, 3차는 가을 9~10월이다.

여행방식은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으로 구분된다. 돌봄가족은 희망하는 여행을 선택해 1일, 1박2일, 2박3일 동안 휴가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선정된 가족에게는 여행 후 휴가비·어르신돌봄비를 지원한다. 가족휴가비는 개별여행의 경우 가구당 최대 35만원, 단체여행의 경우 2인까지 최대 35만원이다. 어르신돌봄비는 최대 12만원이다.

개별여행 신청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단체여행 신청기간은 다음달 29일부터다. 전지우편 또는 우편으로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어르신돌봄봉사자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돌봄자라면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한 참여자는 "장모님의 차매로 집에서 모신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서울에서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그동안 아내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모처럼 여행으로 많은 위로가 됐고 정신적으로도 치유가 됐다"고 말했다.

영중로·태릉시장·제기역~경동시장 로터리 시범거리 조성

시내 6669곳 중 1883곳 우선 추진...상인과 시민 상생·공존

고는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던 거리가게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조치다.

시민의 보행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조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등 필수교육 사항이 담겨있다.

시는 시내 거리가게 총 6669곳 중 가이드라인을 만족해 허가 가능한 1883곳을 우선 대상으로 허가제를 추진한다. 위치 부적절 등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지 못한 곳은 점진적으로 이전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